

민주 “사필귀정·국민 승리”... 국힘 “수궁 어렵다”

李 ‘위증교사 무죄’ 여야 반응

김민석·이연주 등 열썬안고 눈물
“무리한 검찰 수사 방증” 역공도
추경호 “판결 존중하지만 아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필귀정”, “국민의 승리”라며 크게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난 직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1심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을 통해 이번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건 조각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위증교사 이재명 무죄,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한동훈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은 정적 제거용 거짓 칼일 뿐이었다”며 “윤건희 공동정범을 국민과 함께 기소하겠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들이 25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장면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예상 밖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을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안도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정래 의원은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현장에 모인 수십명 의원들 가운데 김민석·이연주 최고위원 등은 이 대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등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지나친 환호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당 일각에서 법정구속 가능성까

지 나왔던 국민의힘은 정반대 결과가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장외집회 등을 ‘판사 겁박’ 행위라며 비판해온 여당은 판사나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궁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초 이날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렸으나, 이 대표 무죄가 선고되자 브리핑을 생각하고 짧은 SNS 글을 올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게 입장을 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논평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권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단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위반 등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명태균 녹취록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의혹은 명 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협력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강원지사, 경남지사,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공천 개입 의혹은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액 후원자가 2021년도 경선 과정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원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오 시장은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핵심인물들이 모두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건희 특검’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사단은 이번주 내로 윤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 “최악의 사태 와도 당 활동 변함 없을 것”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조국혁신당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항상 칼날 위에 서서 살았다. 칼날 위에서 고민했고 칼날 위에서 결단했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를 다 아시면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셨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2월 12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묵묵히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저에게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당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말고 깨끗하게 우리가 결의했던 일은 따박따박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로 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1·2심처럼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찬대 “채해병 국조특위 명단 27일까지 제출”

국회의장 국정조사 착수 ‘환영’

박찬대(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채해병이 순직한 지 1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청년이 이해할 수 없는 상관의 명령으로 숨졌는데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가려야 할 정부와 군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며 가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도



여전히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수사 외압의)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당 대표에 당선되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얼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채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겠다. 수사 외압의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죄를 지는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채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송미령 “野 주도 농업 4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송미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농업 4법이 아니라 농망 4법이라고 생각하고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수준”이라며 대통령 재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법은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남은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올해는 양곡가격 안정제가 추가됐다. 평년 가격을 공정 가격이라고 해서 공정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선 “활증 받는 농가 때문에 다 같이 보험료율이 상승하면 위험도가 낮은 농가의 경우 보험

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고 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선 “응급상황 복구비에 생산비를 다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앞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김선욱 기자